

‘퇴직연금’ 개혁 본격화… 체불 문제해결, 수익률 개선 집중

정부, 퇴직연금 의무가입 확대 추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방안 논의
해외모델 참조 제도 재설계 의견도

정부가 퇴직연금 개혁에 시동을 건다. 의무 가입 대상을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수익률 개선을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을 논의한다. 일각에선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해외 모델을 참조해 퇴직연금 제도를 재설계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퇴직연금 의무 가입을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기준은 있지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현행법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사업자가 매달 일정액을 퇴직 계좌로 납입하게 하는 제도다. 기존 퇴직금이 ‘목돈’으로 지급되는 만큼 노후 자금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012년 7월부터는 신규 개업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 대상 확대 등 개혁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 시민이 노인 일자리 정보를 살피고 있다. /뉴시스

에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미 도입 시에도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영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존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전체의 26.4%에 그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1.7%가 퇴직연금에 가입했지만, 5~29인 사업장은 가입률이 41.4%에 그쳤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가입률이 10.4%에 불과했다.

영세 사업자가 퇴직연금 가입을 미루는 이유는 비용 때문이다. 근로자 퇴직 시 목돈으로 지불하는 퇴직금과는 달리, 퇴직금은 매달 급여의 약 8%에 해당하는 금액에 더해 관리 비용도 지출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23년 신고된 임금 체불 신고액 가운데 38.3%는 퇴직금 체납이 차지하는 등 퇴직금 제도가 임금 체불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만큼, 정부가 대대적으로 ‘손질’에 나선 것.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끌어올리

기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기금형 퇴직금은 가입자의 자산을 모아 기금을 조성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운용하는 방식이다. 전문가가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만큼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것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는 정치권의 오랜 화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인 ‘푸른씨앗’의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도 김문수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금융권의 반발에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금융권은 ‘민간시장 위축’과 ‘퇴직연금 갈아타기’ 등 수익률 제고 방안 도입을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금융권 주도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계속해서 물가상승률을 밑돌면서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는 빠르게 재부상하고 있다.

퇴직연금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해지

는 가운데 일각에선 노후 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해외 사례를 참조해 퇴직연금을 기금형 퇴직연금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연금 연구원은 지난 5월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국내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네덜란드 모델’과 ‘호주 모델’을 소개했다.

네덜란드는 중앙은행이 감독하고, 운용 회사가 기금형태로 연금을 운용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일시금 수령을 금지한다. 호주 또한 기금형 퇴직연금을 운용 중으로, 가입자가 별도의 상품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투자 경험이 적은 가입자에게 적합하게 설계된 단일 디폴트옵션 ‘마이수퍼(Mysuper)’에 자동 가입하도록 정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우리나라 퇴직 연금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의 기능이 매우 미약하고, 퇴직연금의 연금 수급률은 약 10.4%에 불과하다”라면서 “퇴직연금을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명확하게 인식한 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김정관 산업장관 후보자 지명… 탈원전 우려 해소 ‘기대’

〈두산에너지빌리티 사장〉

체코원전 수주 등 산업 회복 가능성
일각선 두산에너지빌리티 실적입증 요구도

산업통장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김정관 두산에너지빌리티 사장(사진)이 지명됐다. 이에 새 정부 출범 이후 커졌던 ‘탈원전’ 회귀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는 분위기다. 최근 체코 원전 수주 계약이 최종 결정된 데 이어 두산에너지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수출 산업 전반의 성장 기반도 한층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정관 두산에너지빌리티마케팅부문장 사장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에너지 및 산업



전략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인물이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재생에너지 확대와 소형모듈 원전(SMR) 등 미래 신사업을 이끌 책임자로 주목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회사를 이끌며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사업 수주를 이끌었고 카자흐스탄 등에서도 원전 마케팅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지난 4일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코바니 원전의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서 해당 프로젝트는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4000억코루나(한화 약 26조원)가 투입되는 신규 원전 2기

를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당초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 계약이 최종 성사됐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정책의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무게를 두면서 원전 산업이 소외될 수 있다는 관측에서 비롯된 반응이다.

다만 김 사장의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움츠렸던 원전 업계에 다시 온기가 돌고 있다. 업계에선 김 후보자를 민관을 아우르는 에너지 전문가로 평가하며 현장과 정책을 잇는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살아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사장의 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원전 사업 회복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이를 실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두산에너지빌리티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3조 7486억원, 영업이익은 14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5%, 4.9% 감소했다. 이는 수익성이 낮은 대형 EPC(설계·조달·시공) 프로젝트 종료에 따른 일시적 요인으로 풀이된다. 다만 2분기부터는 원자력·가스터빈 등 고수익 사업 비중 확대에 따라 실적 개선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아울러 미국의 대형 원전 착공 계획과 SMR 발주가 현실화될 경우 두산에너지빌리티와 관련 업계의 중장

기 수주 확대 가능성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국이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를 착공할 경우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수주 파이프라인에 해당 물량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노형 8기 중 6기에 주기를 공급한 경험을 감안하면 미국의 신규 발주가 본격화될 경우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수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따른다. 두산에너지빌리티 관계자는 “김 사장이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개인에 대한 일이며 회사 측에서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원·달러 환율 1350원… 원화값 8개월만에 ‘최고치’

트럼프 ‘파월 때리기’에 달러 급락
파월 의장 조기 해임 가능성 커져

달러화 대비 원화값이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을 해임하고, 차기 연준 의장을 조기에 지명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3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350.0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전 거래일 대비 7.4원(0.55%) 하락(원화가치 상승)한 가격으로, 지난해 10월 11일 이후 8개월여 만에 최저치(원화값 최고)다.

최근 달러 가치가 하락한 것은 이스라엘-이란 간 군사 충돌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 이어, 제롬 파월 미 연준(Fed) 의장의 조기 해임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어서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5월 임기를 마치는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을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차기 연준 의장은 임기를 3~4개월 앞두고 지명하는 것이 관례인 만큼, 파월 의장의 조기 해임 가능성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의 갈등은 갈수록 고조하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부터 연방정부의 국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준에 금리 인하를 주문하고 있지만, 파월 의장은 물가·고용시장 등의 안정을 이유로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지속하고 있어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25일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국채 이자로 9000억 달러를 내고 싶지 않다. 단지 그(파월 의장)가 기준 금리를 낮추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정치적으로만 더러워진 사람이다”라고 파월 의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세인 가운데,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만큼 달러는 당분간 약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맥쿼리 그룹의 티에리 위즈먼 글로벌 외환 및 금리 전략가는 “트럼프가 비둘기파(통화 완화정책 선호)적이고 반공식(Semi-Official)적인 관점을 제시하려는 시도는 연준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설비투자 3개월 연속 감소, 경기 불확실성 ↑

▶▶ 1면 ‘5월 산업생산…’서 계속

또 “완성차 수출은 증가했는데 신생 부품 같은 경우 5월 제품에 대해선 관세가 부과되다보니, 어느 정도 관세 부과 영향을 받아서 수출 감소가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제조업 출하는 반도체, 컴퓨터 등에서 늘었으나 자동차, 금속가공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1.6% 감소했다. 제조업 재고는 반도체, 전기장비 등에서 줄었으나 석유정제, 전자부품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0.4% 증가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1.7%로 전월대비 2.1%포인트(p) 떨어졌다.

설비투자자와 건설투자자도 모두 감소했다. 5월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4.7% 쪼

드라들었다. 지난 2월 21.3%의 큰 증가를 나타낸 뒤 3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설비투자자가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2년여 만에 처음이다.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0.1%)에서 투자가 늘었으나,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6.9%)에서 줄었다. 소매판매는 보험을 기록했다.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2%), 의복 등 준내구재(0.7%)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화장품 등 비내구재(-0.7%)에서 판매가 줄었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비교해 0.4포인트(p) 낮아졌다.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한 달 전보다 0.1p 내려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